

원수가 된 이웃...살인 부른 '층간소음의 비극'

여수서 윗집 올라가 흥기 휘둘러 40대 부부 숨지고 60대 부모 중상 30대 용의자 범행 30분 후 자수...주민들 "집콕 생활 많은데 불안" 광주·전남 작년 소음 상담 1492건...사회적 갈등 조정 제대로 안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콕' 생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갈등이 살인·폭력·협박 등 극단적 행태로 표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지만 미연에 방지할 사회적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경찰은 27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4)씨를 체포,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층을 찾아가 주민 B씨와 딸 다름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둘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B씨 부인과 부인의 60대 부모에게도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0여 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지난 17일에도 오후 7시께 경찰에 "시끄러워 죽겠다"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층간소음 중재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안내한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윗층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해 사건을 접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날 찾아간 아파트 승강기에는 '발걸음 소리에

신경 써 주세요'라는 관리사무소 협조문이 붙어있었고 안내방송도 나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2년 준공된 9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 108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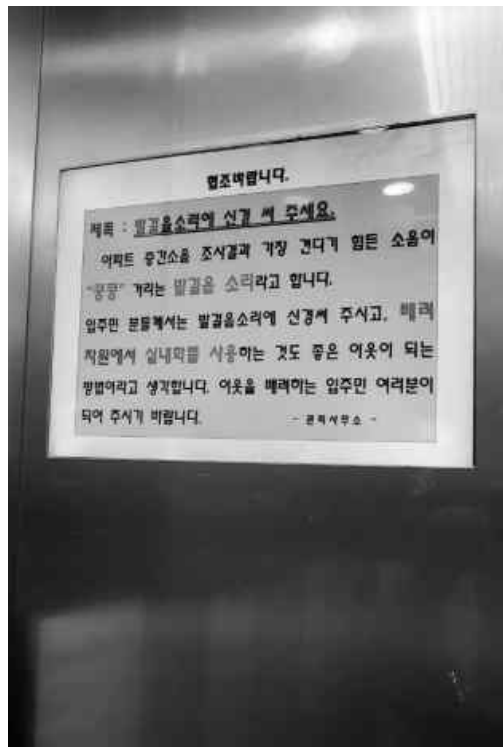
건설 당시만 해도 해당 지역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등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지도, 층간소음 갈등이 유난히 심하지도 않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층간 소음은 어느 아파트나 있을 텐데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단지에서 만난 다른 주민은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날 수 있겠느냐, 공동주택이니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층간 소음 분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광주는 아파트 거주율이 65.5%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라는 점에서 층간소음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27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층간소음 상담사례는 1492건(광주 879건·전남 613건)으로 2019년(736건)에 비해 1.99배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광주 590건, 전남 389건 등 987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을 넘어 현장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신청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 소음 자제를 당부하며 엘리베이터 안에 붙인 안내문.

사례도 급증했다.

2019년 광주와 전남지역 소음 측정을 신청한 경우는 381건인 반면, 지난해 557건으로 4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급격히 변동했지만 생활 방식은 '공동체 문화'를 따라 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지적한다.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소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여수=김민석 기자 mskim@/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층간 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여수시 덕충동 A0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으며, 문앞에 피해자의 혈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광주 학폭전담경찰관 배치율 89%...전국 평균 밑돌아

1명 당 담당학교 10개 넘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운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020명으로 정원 112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학교 학

생·학부모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맡는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지역의 경우 전담경찰 한 명이 맡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 5개 경찰서의 경우 29명의 SPO가 초·중·고 314개를 책임지는 구조로, 1명 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개를 넘는 셈이다.

광안경찰은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27곳, 고등학교 17곳, 위탁특수학교 12곳을 포함해 99개 학교를 경찰 7명이 담당하고 있다. 전담경찰이 밀착해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등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올 해 들어 사건 발생일까지 단 한 차례만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윤 의원은 "광주경찰청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은 86.2%로 전국 18개 경찰청의 평균 배치비율인 90.9%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조사결과, 18개 중 10개 경찰청이 평균에 못 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항소심 출석 조종사들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90)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506항공대 조종사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7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980년 당시 헬기조종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조종사들은 당시 506항공대 소속 작전과장인 최모(72·당시 1번기 정조종사)씨, 박모(72·2번기 정조종사)씨, 김모(68·2번기 부조종사)씨 등으로, 전씨측이 증인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500MD헬기에 무장하고 출동한 것은 인정했지만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보거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중 31사단장이 당시 해남대대로 출동

하면서 헬기에서 총을 쏘 폭도들을 막아달라고 하길래 위협해서 헬기로 사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다리만 쏠 수 있는냐고 물어서 그런 총이 아니라고 했고 사단장이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전일빌딩 내 담은 사진을 보고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볼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조종사들은 전씨측 변호인의 출동 날짜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씨측은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측은 이날 5·18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담긴 군 기록과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탄약 소모율 기록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를 재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 당시 출동한 헬기부대, 헬기마다 장착 가능한 무기 기재원 등이 다른데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질문에 지켜보던 방청객 사이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